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 강화

-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미국은 오늘 새벽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
-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시장안정조치 즉각 시행,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 상호관세 대응 위한 세부지원방안 다음주부터 순차 발표, 경제·산업 체질개선 노력 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4.3일(목)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4.2일, 현지시간)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임홍기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김수현 (minejk34@korea.kr)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ty703@korea.kr)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kimyj1011@korea.kr)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담당자	과 장 최 신 (shin@bok.or.kr)
		책임자	팀 장 이원흠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신환규 (hkshin@fss.or.kr)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4.2, 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¹⁾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습니다.

1) 주요지수 변동(발표 직후 대비 6시) : (달러)+0.1% (美 10년물 국채금리)△9.0bp (S&P500 선물)△2.8% (나스닥 선물)△3.9%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조금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